

2022. 2. 17.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주관:

일시: 2022.2.17. (목) 18:00~21: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ZOOM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개회사



오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늘 12년간 대표로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고 없이 법인 이사장으로 인사 말씀만 전하게 되어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정지현, 홍민정 두 대표님들과 여러 일하시는 분들께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번 20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바른 교육공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선 때 교육공약은 인기 없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 눈치를 보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상상력이 없고 희망을 찾지 못해 교육이란 오직 만인의 투쟁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대통령 후보, 눈치를 보며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정면승부를 해서 표를 얻는 그런 담대한 대통령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같은 행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은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이 엉망이 되어 저러다가는 큰 일 나겠다,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인 공약 평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홍민정 대표께서 변호사 시절에 저희들을 걱정해서 “그렇게 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 곤란하다.”고 경고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후보들이 침묵으로 버티려 할 때 도저히 침묵하지 못하게, 궁리를 했습니다. 후보들끼리 경쟁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자기들의 좋은 공약을 이용해서 다른 후보의 교육공약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저희들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이끌어 냈고, 외교 자사고 폐지 공약을 끌어냈습니다.

오늘의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 무관심의 시대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다시 정치와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각 정당 후보의 교육공약들을 준엄하게 평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누가 보고 듣느냐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듣고 다 지켜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평가한 것은 교육공약으로 채택이 됩니다. 혹 채택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누군가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 우리가 오늘 말한 이 공약이 반드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듣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추위까지 닥쳐 행사로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가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부모들의 시선으로 공약의 옳고 그름을 잘 평가해 주십시오. 그 노력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17.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 축사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1대 아동 대통령선거’에서 아동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채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남은 오늘 ‘제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평가 컨퍼런스’에서 아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교육에 대해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동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평범한 학생 이채원으로서 제가 겪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술 분야로 진로를 선택해서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 중입니다. 미술 분야라고 해도 입시에서는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을 하면서 학교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공부를 썩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때론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모르는 문제를 같이 풀거나 조별 숙제를 할 때도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친한 친구들과도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때론 질투도 하며 간혹 날이 선 모습조차 비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입시 스트레스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도중 어머니께서 물론 진심은 아니셨겠

지만 “이번 입시에 떨어지면 꿈이고 뭐고 미술 그만두고 공부나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공부는 더 이상 재미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반드시 잘 해야만 하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부담’ 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두가 저에게 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중학생이 된 지금 저는 미술이라는 제 꿈을 가졌는데 그러자마자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술을 그만둬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에 ‘꿈’ 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거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꿈을 갖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은 그 나이가 너무 이르고,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입시를 위해 하루에 기본 4시간, 주말에는 8시간 동안 학원에서 중학생 과정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입학 전까지 학교에서 준 과제를 하기 위해 학원에서 또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저의 학교 모습은 어떨까요?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느라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 선생님께서는 “학원에서 다 배웠을 테니 알고 있지, 간단히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이미 학교 교육은 시험이라는 경쟁만이 남은 시험장이 돼버렸습니다.

교육에서의 경쟁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발전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이 학생들을 위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경쟁이라는 무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쉽 없이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은 정책의 하나 그 이상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은 삶 그 자체입니다. 교육에서 불행하면 학생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지금 교육에서의 과도한 경쟁에 떠밀려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교육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방식으로 경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경쟁할 때만 학생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새로 선출되실 대통령뿐 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문에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어른들이 학창 시절 행복한 추억이 없어서, 그 우울한 시절을 내 아이에게는 물려주기 싫어서라고 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아, 어른들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라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른이 되어 결혼할 때는 결코 “우리 아이도 나처럼 입시 지옥을 겪을 테니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변화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자,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오늘날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신 ‘100인 평가단’ 분들의 공약 평가 덕분에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공약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거듭나서 학생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서막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동 대통령이자 16살이 된 이채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17

제1대 아동 대통령 이채원 (아동안전위원회)

일 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여는 행사	06:00	영상상영	
	06:05	개회사 축사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이채원 아동 대통령
	06:10	100인 평가 운동 경과보고, 평가 방식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06:25	퍼포먼스	손피켓 퍼포먼스
공약 평가	06:30	이재명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07:10	윤석열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교육공약책임자(섭외중)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07:50	안철수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김진수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08:30	심상정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및 사진촬영			

*발표 순서는 지지율과 캠프 스케줄, 참여 캠프 개수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 목 차

1부

-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행사 안내 1
- 평가 안내 3
- 국민 추천 12개 공약 8

2부 : 20대 대선 사교육 공약 관련 후보별 공약 발표 및 평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12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24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32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42

3부

- 100인 평가단 명단 57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행사 안내

■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행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 일시: 2월 17일(목) 오후6시-9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온라인 화상회의(ZOOM)

* ZOOM 주소는 추후 평가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는 서면질의서 발송 시기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순위 1위~4위까지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후보 혹은 교육공약책임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 각 후보의 모든 교육공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약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12개 공약 내용을 근거로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 해소에 적합한 공약인지 판단합니다.

□ 컨퍼런스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고, 후보 발표 및 평가는 ‘후보측 공약 설명 5분 + 패널 토론 15분 + 평가단 질의 및 후보측 마감 발언 15분’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여는 행사	06:00	영상상영	
	06:05	개회사 축사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이채원 아동 대통령
	06:10	100인 평가 운동 경과보고, 평가 방식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06:25	퍼포먼스	손피켓 퍼포먼스
공약 평가	06:30	이재명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07:10	윤석열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교육공약책임자(섭외중)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07:50	안철수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김진수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08:30	심상정 후보 발표 및 평가	[공약 발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패널 토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용은중 학부모/ 이서연 청년 [평가단 질의/ 후보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및 퍼포먼스			

*발표 순서는 지지율과 캠프 스케줄, 참여 캠프 개수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 그런데 3개 영역 1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각 후보당 35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공약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컨퍼런스 전에 집에서 ‘후보별 답변 자료’ 를 읽고 평가표에 연필 등으로 가채점을 하신 후 당일 행사장에서 후보 별 토론 내용을 듣고 최종 채점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 당일 예고없이 불참하시는 경우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될 경우 2/14(월) 오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컨퍼런스 시작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은종 사업국장 (02-797-4044, 내선 419)에게 문의바랍니다.
-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는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안내

□ 평가항목

2021년 3월 9일 통계청은 사교육비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로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8만원(전년대비 ▲2.3만원)으로 도리어 올랐습니다. 역대급 수치를 갱신한 이 조사 결과는 코로나도 꺾지 못하는 입시 경쟁, 사교육 경쟁과 고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교육과 입시경쟁 고통의 문제는 정부가 단골로 사용하는 EBS 수능 방송 70% 연계 정책이나 학교 방과후 교실을 학원화하는 정부의 대책 등으로는 풀릴 수 없습니다. 핵심은,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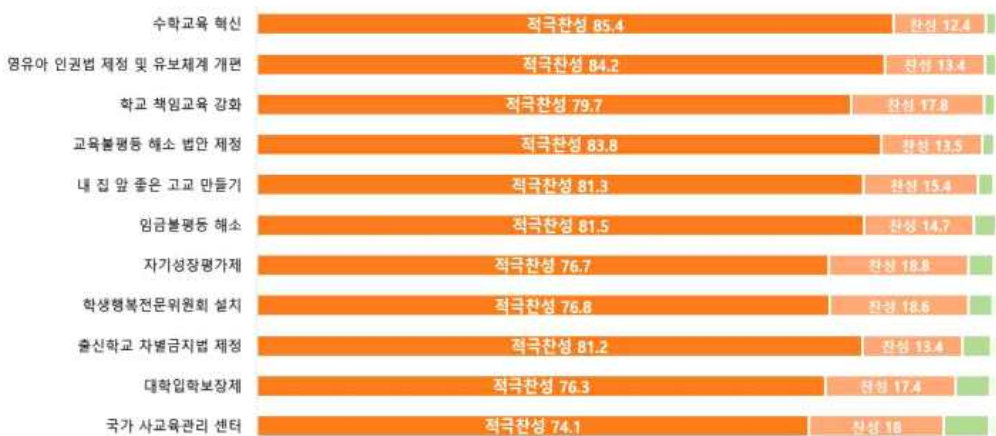
입시경쟁 고통의 문제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책임 교육 부재 ▲ 교육의 영역과 채용 등 사회 전 영역에 관행적으로 퍼져 있는 성적 차별 불공정 ▲ 이 무한 경쟁 레이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 경쟁 심화 3요소로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 교육 고통의 문제는 이런 제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내놓아야 풀려질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개의 유발요소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11개 공약을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 선호도와 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 국민 공약 선호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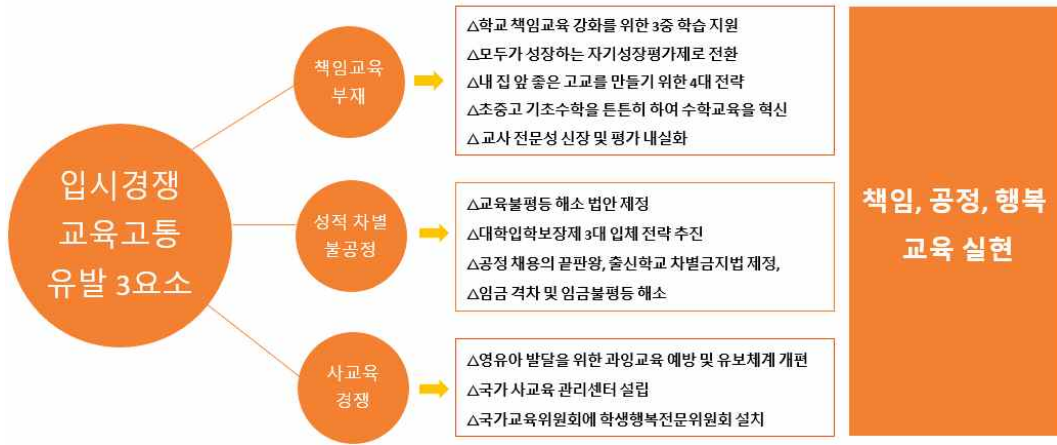
설문 내용	설문 기간	응답자 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안 11개 공약에 대한 선호도와 추가 공약 제안	2022. 1. 11.~1. 16.	1,497명

11개 공약에 대한 시민 선호도 설문 결과



이번 설문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1대 공약의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약과 겹치거나 유사한 내용과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내용, 사교육 경감과 지나치게 관련성이 부족한 내용을 빼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과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제안을 추려보았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 내 실화’ 는 공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를 포함한 12가지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대 대선 교육공약 100(人) 현장 평가 컨퍼런스 의 대선 교육 공약 평가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책임 교육 실현 대책 ▲교육의 영역과 채용 등 사회 전 영역에 관행적으로 퍼져 있는 성적 차별 불공정해소 정책 ▲ 무한 경쟁 레이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 경쟁 해소 정책, 이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3가지 방안 총 12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12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 평가 항목

분야	국민 추천 12개 공약	질의 내용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2. (평가제도 개선)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학교 시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줄세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3. (고교 체제 개선) 고교서열화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서열의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유형의 학교를 넘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	4. (수학 교육 혁신)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수학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p>내실화 (시민 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p>	<p>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p>
<p>공정 교육을 위한 4대 공약</p>	<p>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p>	<p>6. (교육불평등 해소)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해마다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고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슈퍼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p>
	<p>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p>	<p>7. (대학서열 해소) 촘촘하게 한줄로 줄세워진 대학서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p>	<p>8.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9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대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p>	<p>9. (임금 격차 해소) 교육 결과에 따른 성취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p>
<p>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p>	<p>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p>	<p>10. (영유아 교육 개편)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p>
	<p>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p>	<p>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p>
	<p>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p>	<p>12. (학생 행복 추구)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큼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p>

□ 평가 방식

평가 점수 방식은, ‘매우 적절하게’, ‘적절하게’, ‘미흡 혹은 부실하게’, ‘매우 미흡하거나 매우 부실한’, ‘전혀 수용하지 않은’ 5개의 척도로 평가하되, 국민 추천 12개 공약을 참고로 해당 영역의 공약이 ‘적절한지’ 를 평가합니다.

※ 적절성 여부 기준 : 경쟁 교육 고통 해소 공약 12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후보의 공약 안에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담겨 있는지 종합평가해서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 매우 적절하다 : 경쟁 교육 고통 해소 공약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요소를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 적절하다 : 경쟁 교육 고통 해소 공약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미흡하다 : 경쟁 교육 고통 해소 공약 내용 중 일부만이 포함되어 있고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요소 중 두가지 이상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매우 미흡하다 : 경쟁 교육 고통 해소 공약 내용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 경쟁 교육 고통 해소 공약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쟁 교육 고통 해소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내용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절하게 반영 <input type="checkbox"/> 적절하게 반영 <input type="checkbox"/> 미흡(부실)하게 반영 <input type="checkbox"/> 매우 미흡(부실)하게 반영 <input type="checkbox"/> 전혀 반영 안함

■ 평가를 위한 기준 : 국민 추천 12개 공약

(※후보별 공약을 평가하실 때, 우리 단체와 국민들이 추천한 아래 12개 공약 주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내용을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 국민 추천 12개 공약 주요 내용

분야	국민 추천 12개 공약	내용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책임교육 강화 :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전담교사 · 다중지원전문교사팀 · 학습종합지원센터 · 학부모안심홈티칭'등, 학교 안팎의 학습지원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중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교원양성 체제를 마련합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2. (평가제도 개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교육과정이 정한 성취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합니다.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3. (고교 체제 개선) 내 집 앞 어떤 고교에 가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평준화, 고교서열화 해소 · 영재교육정상화 · 내실있는 고교학점제 운영'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	4. (수학 교육 혁신) 수포자를 양산하는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킬러문항) 출제를 근절하고, 수학적 사고를 끌어내는 학교 수업과 평가 구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학 교사 양성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공정 교육을 위한 4대 공약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시민 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	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책임교육을 현실화 합니다.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6. (교육불평등 해소)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슈퍼불평등 국가, 이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교육제도,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제정해 국가가 원인을 정밀진단하고 반드시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p>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p>	<p>7. (대학서열 해소) 일정 자격만 갖추면 원하는 전공 입학을 보장하는 공동입시 추진·전폭적인 재정지원·대학의 자원 공유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간판뿐인 대학 서열을 해소합니다.</p>
	<p>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p>	<p>8. (출신학교 차별금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력서 혹은 지원서에서 출신학교 란을 삭제,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p>
	<p>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p>	<p>9. (임금 격차 해소) 임금불평등은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해 입시경쟁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p>
<p>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p>	<p>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p>	<p>10. (영유아 교육 개편) ‘영유아인권법’제정 및 보육·교육 체제 개편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과잉 교육을 예방하고 놀 권리 보장과 적기교육을 확산하는 영유아인권법을 제정하며 차별과 격차가 없는 보육·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보체계를 개편합니다.</p>
	<p>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p>	<p>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신설해 ‘과도한 선행학습·심야교습·고액과외’를 근절하고, 청소년에게 휴식과 여가를 돌려줍니다.</p>
	<p>국가교육위원회 에 학생행복전문위 원회 설치</p>	<p>12. (학생 행복 추구)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및 자해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행복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학생의 위험 스트레스 지수와 그와 관련된 수면, 여가, 학습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해결 방안 마련과 실행을 국가의 의무로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학생의 행복을 책임집니다.</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 추천 12개 공약’ 답변 내용

* 아래 평가표에 서류(사전/잠정)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최종 평가는 컨퍼런스 당일 구글 설문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류	국민 추천 12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평가(타당성/구체성/실현가능성)				
				매우 적절	적절	미흡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함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p>○ 갈수록 저학년 단계부터 학습격차가 커지고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여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는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는 커지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p> <p>○ 이재명 후보는 의무교육단계 기본학력 책임 강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성 지능 학생 및 기본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 맞춤형 통합 지원 뿐만 아니라 초등 단계부터 AI 기반 개인 맞춤형 기본학습역량 진단 및 보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중3단계에서 희망 학생 및 학교에 대해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하고 학습보충을 지원하는 등 책임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p> <p>○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책임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본학력 책임교육을 실현을 교원수급 정책의 핵심적인 지표로 삼아 학령인구 감소로 지나치게 교원 수를 줄이기보다는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p>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 평가제로	2. (평가제도 개선)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말처럼 평가 체제가 교육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단순한 암기와 수용보다는 지식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와 학생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기성장 평가제, 즉 과정중심평가는 기존의 결과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의 선발적 평가에서 벗어나 수업 과정과 결과를 통한 성장과 발달을 평가하여 학생이 최선을					

	<p>전환</p>	<p>학교 시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세 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p>	<p>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p> <p>○ 학생의 성장을 돕는 자기성장 평가제(과정중심평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학교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평가방법이 대학입시나 학생 개인의 성취에 매몰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성장평가제로 학생에게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울퉁은 인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p>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p>	<p>3. (고교 체제 개선) 고교서열화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서열의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유형의 학교를 넘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p>	<p>○ 과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고교체제 개편이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간의 서열화만 남기고, 사교육 고통과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일반고 중심의 고교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경직된 학교를 혁신하고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실질적 분권화와 자율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전담기구를 설치해, 고교학점제 모니터링과 수업의 질 관리, 평가</p>					

			<p>의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학년별 시간 배당 일부를 교육청에 위임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하고 교과서 범위 축소 등 교육청의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를 확대하겠습니다.</p> <p>○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은 대입과도 맞물려있습니다. 시행된 지 30여 년이 다 된 수능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입 제도의 방향을 충분히 검토·개편하여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p>		<p>4. (수학 교육 혁신) 수 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수학 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p>	<p>○ 한국의 수포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수포자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된 과정과 이유가 거의 동일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포자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강권에 따라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수학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처음부터 수학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면 공식을 달달 암기하게 되다가 수학이 싫어지게 되면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p> <p>○ 더욱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교과내용이 어려워지고 입시 변별력을 위해 킬러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어 기초 내용을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따라잡기 어려운 교육과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지나친 입시경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포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잘못된 경험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 해나가야 수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p> <p>○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안 수학교과서의 보급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수학 지식이 없더라도 일상적 경험으로 수학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어려운 수학기호와 공식은 나중에 가르치도록 수학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포자를 줄이는 교사 연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시민 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p>	<p>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p>	<p>○ 우리나라의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3가지 체제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각 평가의 시작 시기와 도입 목적은 다르지만, 평가 자체가 갖는 거부감과 평가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느 주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로 간소화되었으나,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p> <p>○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학부모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향하기보다는 학부모나 학생이 종종 교사나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측면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여율은 저조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제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답답할 뿐이라는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 또한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거부감 또는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 취향에 부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p> <p>○ 교원평가가 평가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랜 한국의 교육전통에 비추어볼 때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p>					
<p>공정 교육을 위한 4대 공약</p>	<p>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p>	<p>6. (교육불평등 해소)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해마다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고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p>	<p>○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 되어서도 안되고,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저의 스토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대전환이 필요합니다.</p> <p>○ 이재명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철학은 공정과 상생의 가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부하고 싶은</p>					

		<p>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슈퍼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p>	<p>아이들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배우고 싶은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p> <p>○ 지난 1월 7일 발표한 '8대 교육 공약'은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담아,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교육의 공백부터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우리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가 함께 성장하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 돌봄과 교육에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기본학력 만큼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p> <p>○ 국가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지역사회의 위치와 문화에 따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을 위하여 더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대학입학 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p>		<p>7. (대학서열 해소) 촘촘하게 한줄로 줄세워진 대학서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 선진국에도 좋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수직적으로 촘촘한 서열체제를 갖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수십년간 존속해온 입시경쟁 위주 교육은 수많은 교육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입시 스트레스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생과 가정의 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p> <p>○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학서열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p> <p>○ 또한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여 학과 또는 전공 단위 공유대학은 물론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학벌구조를 혁파하고 교육 균형발전</p>					

			<p>을 이뤄낼 것입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반칙없는 공정한 대입전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입시경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p> <p>○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무상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곧바로 진학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단기 직업교육 기회 확대, 평생학습계좌제 등 청년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교육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p>					
<p>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p>	<p>8.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9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대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 뿌리깊은 학벌주의는 정당한 능력에 대한 평가에 앞서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진학, 채용, 임금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대입경쟁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학의 운영주체 및 구성원들이 학벌에 안주하거나 학벌을 장벽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게 하는 병폐입니다.</p> <p>○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2016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일정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학입학 과정이나 공공부문 채용에서 출신학교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가 시행됨으로써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p> <p>○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분도 민간부문에서 채용과 임금 등 차별에 대해 효과적인 방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고동·노동과 관련해 부처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p> <p>○ 출신학교 차별은 문화나 관습이 아닌 권리 침해이자 병폐이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듯이 학벌에 따른 차별로 권리를 침해 당한 개인 및 단체의 구제 신청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일정</p>						

			<p>정도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은 임금 불평등으로,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누구나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단단히 세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p> <p>○ 의무교육단계 기본학력을 포함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금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산업체,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로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격차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p> <p>○ 이미 교육 불평등과 기회의 빈곤이라는 늪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계층 전반의 삶의 질을 높ی겠습니다. 청년들이 눈앞에 닥친 주거나 생계의 걱정을 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p> <p>○ 보다 실질적으로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표준임금체계 도입, 적정임금제도 적용 등이 필요합니다.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경기도에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도입한 바 있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가 공공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업,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p>					
<p>행복 교육을 위한 3대</p>	<p>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p>	<p>10. (영유아 교육 개편)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영유아의 발</p>	<p>○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3조 7,397억원을 넘어 전체 유아교육·보육비의 44.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나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공립시설보다 사설학원이나 가정학습을 통한</p>					

공약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 체제 개편	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교육 비중이 큼니다. 모국어나 외국어 학습 같은 인지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체제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영유아기의 사교육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습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영유아기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와 교육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고른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부처 통합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도 높일 것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장애 영유아들에게도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 국가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	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	○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공교육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과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서열구조 온존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교육비 절반’을 내세웠지만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을 통해 물리적으로 사교육 수강 시간을 줄이는 대중요법에 그쳤고, ‘학파라치 도입’등 학원에 대한 통제정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선행학습 금지는 학교에 적용하는데 그쳤습니다.					

		<p>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p>	<p>○ 문제는 전 정부에서는 정작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요소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자사고·특목고 전성기를 맞고, 대입자유화로 사교육 의존도만 높이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과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지만 단기적 대책에는 집중하지 못해 사교육비가 늘어난 점도 뼈아픈 지점입니다.</p> <p>○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국가 책임교육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완화함으로써 사교육이 필요없는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공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사교육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사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교육 현황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p> <p>○ 특히, 불법·고액 사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수도권지역 오피스텔 불법 과외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처벌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교육이라고 법과 원칙의 무풍지대가 될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추가로 정비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p>	<p>12. (학생 행복 추구)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p>		<p>○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강국 동력으로 ‘교육’을 지목하고 있기도 하고, PISA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교육이 인정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OECD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PISA 학업 흥미도 및 자신감 최하위권이라는 분석 결과도 오래전부터 따르고 있습니다.</p> <p>○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교육 격차로 인한 학습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자 스트레스도 커지게 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으로 인한 정서·심리적 상처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p>					

		<p>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p>	<p>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정서·심리 치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Wee센터와 외부상담기관을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치료비와 방문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p> <p>○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아이들의 정서·심리를 포함한 교육회복은 2년만에 종료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6년까지 장기간 지속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소극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대면수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아이들의 정서·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일상 학교생활이나 교육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p> <p>○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와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삶을 억누르는 요소는 제거·완화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은 소중한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되는 각종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원들의 동의로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	---	---	--	--	--	--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 추천 12개 공약’ 답변 내용

* 아래 평가표에 서류(사전/잠정)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최종 평가는 컨퍼런스 당일 구글 설문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류	국민 추천 12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평가 (타당성/구체성/실행가능성)				
				매우 적절	적절	미흡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함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의 학력 수준 및 특성을 진단하고 - AI튜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보충 혹은 심화 학습지도 -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학습결손 지도 및 관리 책임 강화 - 시도단위 기초학력클리닉센터 활성화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2. (평가제도 개선)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학교 시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제 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표 및 학습 목표의 도달도 확인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 - 단순 점수위주보다 학생의 성장을 참조하는 서술식, 논술식 평가 장려 					

		<p>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p>						
<p>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p>	<p>3. (고교 체제 개선) 고교서열화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서열의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유형의 학교를 넘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평준화가 반세기 이상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으나 하향평준화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많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극단적인 평준화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되어야 함 -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 계획 						
<p>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p>	<p>4. (수학 교육 혁신)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수학 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재미있게 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법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 - AI튜터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수학교과 지도 지원 						

		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시민 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	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및 피드백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대상자의 내실 있는 연수 제공 -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내실 있는 결과 활용 - 교사가 행정업무를 덜고 수업준비에 전념하도록 교육행정 인력 충원 						
공정 교육을 위한 4대 공약	교육불평 등 해소 범안 제정	6. (교육불평 등 해소)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해마다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고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슈퍼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 제고가 윤후보의 교육비전임 -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게 지원할 것임 -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 영유아의 출발선 동등성을 위한 무상 보육 및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							
대학입학 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7. (대학서열 해소) 촘촘하게 한줄로 줄세워진 대학서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학서열 체계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임. -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이 핵심역량으로, 대학의 경쟁력은 학과의 특성과 교육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8.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9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대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마다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채용 계획의 사전 공지 및 핵심 직무능력 기준 공개 - 학력, 자격, 직무경력 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평가역량체계 구축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	9. (임금 격차 해소) 교육 결과에 따른 성취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단위 임금체계 도입 활성화 -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 						
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 체제 개편	10. (영유아 교육 개편)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성장 위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 만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 영유아의 놀이학습 지원 활성화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지원 필요 -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대입제도 예고제를 현행 3년보다 확대해 대입제도를 안정화 						

	<p>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p>	<p>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p>						
	<p>국가교육 위원회에 학생행복 전문위원회 설치</p>	<p>12. (학생 행복 추구)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큼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행복 추구권 보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분위기 조성 - 재미있고 차별 없는 AI튜터를 활용하여 학습 스트레스 완화 및 해소 - 상담을 통한 학생 상담 및 정서 지원 확대 - 아동의 정서 및 사회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	---	--	--	--	--	--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 추천 12개 공약’ 답변 내용

* 아래 평가표에 서류(사전/잠정)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최종 평가는 컨퍼런스 당일 구글 설문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류	국민 추천 12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평가 (타당성/구체성/실행가능성)				
				매우 적절	적절	미흡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함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수업과 사교육의 영향이 커지며 격차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수가 증가했는데, 기초학력은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자 인권으로, 학교에서 책임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위권 아이들의 더욱 심각해진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①기초학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연도별 미달 비율 해소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②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학생·학교·교육청에 인센티브를 드리고 ③필요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2. (평가제도 개선)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학교 시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제 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	- 교과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이 이뤄지고, 평가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은 공교육의 본질을 위면하고 교육 불평등을 스스로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평가제도가 공교육 교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발생하는 상위권 학생에게 ‘성적 몰아주기’,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철저히 감사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정계하겠습니다.					

		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3. (고교 체제 개선) 고교서열화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서열의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유형의 학교를 넘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공교육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학제를 개편하는 교육개혁안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만 6세 입학,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의 학제를 만 3세 입학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or 직업학교 2년→대학 4년 or 직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 중등 5년 후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어느 과정을 선택해도 아이들이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일찍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을 다닐 것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닌 학점이수제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4. (수학 교육 혁신)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제도로 매몰되어 창의적 인재양성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공부까지 엄청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한번 진도를 놓쳐버리면 따라가기 힘든 교육체계로서 엄청난 학습량을 필요로 합니다. 수학 교육을 핵심 개념 위주 교육으로 개편하고, 주어진 문제를 암기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닌, 							

	<p>수학교육을 혁신</p>	<p>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수학 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p>	<p>스스로 해결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제안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p>					
	<p>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시민 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p>	<p>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전문성 신장은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주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혁신사안이기도 합니다. 우선 교사의 개념을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중재해주는 교사로서 개념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당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선생님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각종 공문처리에 시달리고, 수업보다 기타 업무에 더 시달리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본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업무는 과감히 줄여주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교원 양성 체제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교사 자격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초등의 저학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폐쇄형 구조가 아니라 반개방형으로, 종합적인 교원양성체제로 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 특히 학제개편을 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말씀드렸던 진로탐색형 학교의 교사는 전통적 사범대학이 아닌 타 영역에서 전문영역을 갖추고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원 양성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p>공정 교육을</p>	<p>교육불평등 해소</p>	<p>6. (교육불평등 해소)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입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기회의 공정은 누구나 같 					

위한 4대 공약	법안 제정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해마다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고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슈퍼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	은 출발전에 질 때 만들어집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장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먼저 개혁하겠습니다.					
	대학입학 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7. (대학서열 해소) 촘촘하게 한줄로 줄세워진 대학서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1. 대학입시에서 부모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 + 절반은 수능·내신 50%씩 반영) - 사회적 배려계층 10% - 특기자 전형 10%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2. 특별전형 전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3. 로스쿨+사시제도 병행 4.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자율'과 '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통제부'에 불과한 교육부는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조직개편으로 대학마다 특성에 따른 창의적 인재양성과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별 발전 및 운영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객관적 평가지표로 평가한 후 대학별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원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가 줄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을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장인 한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 직장 그리고 각 가정과 연계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습사회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p>서는 지역대학의 공간과 인프라를 지역사회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대학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료를 개방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 청년 창업 등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가는 중장년을 위해서라도, 대학이 지역의 교육 허브로 기능해야 합니다. 지역의 대학을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와 같이 평생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장으로 대학을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p>					
<p>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 제정</p>	<p>8.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9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대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개정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해 고용세습과 채용청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출신학교로 인해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입법에 함께 반영하겠습니다.</p>					
<p>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p>	<p>9. (임금 격차 해소) 교육 결과에 따른 성취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p>	<p>- 4차산업혁명시대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화 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무엇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청년과 여성·비정규직에게도 직업 안정성과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임금격차를 심화시켰고, 비정규직이 사상</p>					

		<p>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p>	<p>최초로 8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임금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강성 귀족노조는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조'라는 것 발 아래, 비노조원들을 차별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 대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아 불평등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임금 상승과 고용 연장만을 주장하며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p>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p>	<p>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 체제 개편</p>	<p>10. (영유아 교육 개편)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과잉교육 방지, 놀권리 보장, 보육교육체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임기 내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부모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보육을 '국가책임제'로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체제의 질을 높이며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2027년까지 매년 838개 이상 확충, 임기 말 공공 보육 이용률을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p>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p>	<p>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초등학교생들의 '학원 뺑뺑이'를 방지하고, 맞벌이 부부가 저녁 7~8시까지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전일제 학교'는 정규 교육 외에 방과후 7~8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 △사회적책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p>근절</p>	<p>선행, 심야교습, 교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p>	<p>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는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일찍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을 다닐 것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공교육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닌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현재의 만 6세 입학,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의 학제를 만 3세 입학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or 직업학교 2년→대학 4년 or 직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어느 과정을 선택해도 아이들이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p>	<p>12. (학생 행복 추구)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큼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건강한 아동발달, 정서와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보육시설-보건소-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지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기적인 아동검진을 통한 학대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체계적인 아동주치의제도를 통해서 심리상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진학 이후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는 매년 꼴찌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경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영수 위주의 교과제도에서 체육·미술·음악 등 아이들이 예 					

	<p>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p>	<p>체능 교과 시간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 등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p>					
--	---	--	--	--	--	--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 발표 및 평가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 추천 12개 공약’ 답변 내용

* 아래 평가표에 서류(사전/잠정)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최종 평가는 컨퍼런스 당일 구글 설문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류	국민 추천 12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평가 (타당성/구체성/실행가능성)				
				매우 적절	적절	미흡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함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 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중하위권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눈을 맞추면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교육 또는 책임교육이 요구됩니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학교 책임교육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교육 여건을 만들고, 수업과 평가를 바꾸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신증설, 교원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 과밀학급 우선 해소 후 20명 목표로 단계적 개선 ○ 선진형 교수학습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오프라인 넘나드는 공유형 에듀테크 구축 - 인공지능 기반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보다 나은 수업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학생의 자기주도능력 신장하는 수업으로 다변화 - 성취평가제 시행, 일제식 평가 폐지 등 학생 성장 돕는 평가방식 구현 ○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한반 20명 등과 함께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 도입 - (2단계) 1수업 2교사제 등 어려움 겪는 학생을 위한 개별 집중지원 - (3단계) 학교 안팎 자원 등 전문적 도움 필요한 학생 위한 특별지원 ○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학력전담교사, 상담교사, 학교복지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등 확충 - 학생 개개인 학습이력 관리 및 개별화 멘토링 - 지역마다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p>○ 진단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초중고의 96.3%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점, 교육당국이 심리 정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인 점, 코로나19 중장기 중단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부족할 경우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p>					
모두가 성장하는	2. (평가제도 개선) 변	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 학생수 감소는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발달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 비추면 줄세우기 상대평가는 한계 뚜렷합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					

	<p>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p>	<p>출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학교 시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제 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p>	<p>먼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적합한 평가방식이 요구됩니다. 저희 공약에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평가제 시행, 일제식 평가 폐지 등 학생 성장 돕는 평가방식 구현 -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 - 수능 절대평가 확대 </div>					
	<p>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p>	<p>3. (고교 체제 개선) 고교서열화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서열의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유형의 학교를 넘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p>	<p>○ 외교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오는 2025년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 있으나 행정의 일관성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을 감안해볼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에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평준화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준화를 기본 체제로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학교장 선발(비평준화)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허용 ○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추진 ○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div> <p>○ 영재학교 및 과학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치, 일반고 교육여건을 상향하기 위한 행정지원 확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당 활동에서 챙기겠습니다.</p>					
	<p>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p>	<p>4. (수학 교육 혁신)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수학 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p>	<p>○ 수포자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리 발견의 즐거움을 느끼는 수학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수학부터 해야 한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p>					

			<p>○모두의 배움을 책임지는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배울 기회가 없는 학생도 배려하는 한글교육 -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리 발견의 즐거움을 느끼는 수학교육 -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어교육 <p>○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한반 20명 등과 함께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 도입 - (2단계) 1수업 2교사제 등 어려움 겪는 학생을 위한 개별 집중지원 - (3단계) 학교 안팎 자원 등 전문적 도움 필요한 학생 위한 특별지원 <p>○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학력전담교사, 상담교사, 학교복지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등 확충 - 학생 개개인 학습이력 관리 및 개별화 멘토링 - 지역마다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p><대입제도 관련 공약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절대평가 확대 <p>○ 수포자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학 교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제, 전문적 교원양성 제도, 배움 중심의 수학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운영 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방안을 의정활동 등에 반영하겠습니다.</p>					
	<p>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시민</p>	<p>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p>	<p>○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여론조사서를 보면, 학교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꼽는 질문에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가 적지 않은 답변을 받았 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다섯 번째, 초중고 학부모는 네 번째 응답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또다시 확인됩니다. 학교의 수평적 문화에 적합한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약에 담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p>	<p>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수준 교원 양성,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안식연구년제 실시 - 교원의 노동 및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장 제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급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차등 성과급을 능력개발수당으로 전환 </div>					
<p>공정 교육을 위한 4대 공약</p>	<p>교육불평 등 해소 법안 제정</p>	<p>6. (교육불평등 해소)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해마다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고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슈퍼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찬스, 금수저 은수저 등의 말들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교육기관의 상생발전이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가정의 경제력 등이 학교교육에 영향 주지 않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부모찬스를 차단하며, 모든 학생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공약에 반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열의 발전적 해소, 상생발전, 부당한 차별 금지 등입니다. 책임교육 사항들은 앞서 1번 문항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10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 지원하여 교육력 제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장) - 대학 네트워크 구축 : 공동 이수 및 공동 학위 수여 (향후 공동 전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육 재정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전반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 경상비와 연구비 등 대학 간 균형있는 재정 지원으로 상생발전 도모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고교 평준화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준화를 기본 체제로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학교장 선발(비평준화)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허용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추진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조치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p>○ 교육당국은 사회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지표 및 실태조사 법제화, 기본계획 수립, 성과 공개 등도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등에 반영하겠습니다.</p>					
<p>대학입학 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p>	<p>7. (대학서열 해소) 춤춤하게 한줄로 줄세워진 대학서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고착되고 있</p>		<p>○ 대학서열과 학력학벌사회가 경쟁교육을 불러일으키고 사교육비를 키웁니다. 학생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은데도 대입경쟁이 여전하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서는 상향평준화 형태로 접근하고, 공동전형 공동이수 공동학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융복합에 부합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p>					

		<p>습니다. 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약에 반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10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 지원하여 교육력 제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장) - 대학 네트워크 구축 : 공동 이수 및 공동 학위 수여 (향후 공동 전형)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 지정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륭한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을 지닌 지방대학 우선 지정 - 정부 책임 하에 '지역-대학-산업' 연계 발전 방안 추진 - 미래사회 대비, 학문 융복합 및 교류, 지역사회 기여, 학생 책임지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육 재정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전반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 경상비와 연구비 등 대학 간 균형있는 재정 지원으로 상생발전 도모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 전체 정원 조정 <p><대입제도 개편 중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고교학점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 -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 전형으로 개편하여 '내신 성적 + 교사의 정성적 기록'만 반영 - 수능 절대평가 확대 - 기회균등, 지역균형,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대학의 선발 결과에 대한 세부 통계 공개하여 균형선발 유도 ○(2단계) 대학 네트워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자격고사화 - 전국단위 국공립대 네트워크 및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축 - 공동 이수 진행 및 공동 학위 부여, 이후 공동 전형 실시 					
--	--	--	---	--	--	--	--	--

<p>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 제정</p>	<p>8.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9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대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p>	<p>○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교육여론조사에서 56.8%의 국민이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폐해에 대해 절반 넘는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 발전과 사회 역동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학력학벌 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상당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관련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input type="checkbox"/>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p> <p>○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조치</p> <p>○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p> </div>					
<p>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p>	<p>9. (임금 격차 해소) 교육 결과에 따른 성취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p>	<p>○ 고등학교만 마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선진사회입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일하다가 필요에 따라 대학 진학하거나 재교육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보다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력간 임금격차로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만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p> <p>○ 관련한 공약은 노동 부문과 교육 부문에 있습니다.</p>					

			<p>(노동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의로운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평등수당 제도 신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제화하고 국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 업종, 고용형태별 임금구조 및 개선방안 등 조사하여 제시하여 임금 격차 해소 ○ 최저임금 인상 및 최고임금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등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산입범위 재조정,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의 임금격차가 없도록 최고임금법 도입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p>(교육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고졸 첫 임금 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주관 사회적 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정부, 산별노조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횟수 확대 ○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정부부터 고졸채용 앞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채용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input type="checkbox"/>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 사립학교 살전고양이법 포함 					
--	--	--	--	--	--	--	--	--

<p>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p>	<p>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 체제 개편</p>	<p>10. (영유아 교육 개편)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p>	<p>○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로 부처, 시설, 교사 양성 등이 다릅니다.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일원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유보통합은 3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으로 일부 무상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학부모부담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p> <p>○ 유아 3년 책임교육에 대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input type="checkbox"/> 유아 3년 책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학부모 부담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 신증설, 공영형, 매입형 등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 [2단계]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교육시킬 의무, 학부모가 취학 결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통합하여 유아학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보육 교사양성 및 부처 일원화 → 유아학교 제도 마련,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 유아교육 완전무상교육 실시 </div>					
	<p>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p>	<p>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p>	<p>○ 사교육은 차별과 서열에 따른 입시경쟁이 원인입니다. 해법은 수요 측면에서 접근과 공급 측면에서 접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 접근은 6번 문항의 교육불평등 해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p>					

<p>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p>	<p>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사교육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교육과 입시사교육 모두 과도한 선행학습 금지 ○학원 일요휴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거쳐 법 개정 </div>					
<p>국가교육 위원회에 학생행복 전문위원회 설치</p>	<p>12. (학생 행복 추구)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큼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실태 파악 및 맞춤형방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징후 등 학생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교육부 학생건강검사가 있고, 질병관리청 교육부 공동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심리정서 진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검사나 조사들이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현장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의 진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확대 및 내실화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진단을 토대로 Wee 프로젝트,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전문가 학교방문, 등교수업 확대등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방이 적시에 되도록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정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p>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p>						
--	--	--	--	--	--	--	--	--

■ 100인 평가단 명단 (총113명)

강경화	김은주	백호영	이용현	조미정
고만철	김은희	백호정	이윤경	조성연
공후재	김재은	성정희	이은실	조찬영
권성구	김정숙	송선영	이재영	조태진
권신영	김제완	송지혜	이정수	채미란
김경원	김 준	송환웅	이정애	최봉선
김경훈	김지숙	신승범	이지선	최상길
김기수	김혜진	신인수	이한복	최승현
김동춘	김희성	신채봉	이현우	최재하
김미숙	남궁용훈	심우기	이현주	최진이
김미희	류덕호	양희전	이현희	최현영
김민정	류해옥	엄익환	이혜원	한느티
김상규	문태호	오옥분	이혜진	한달용
김상근	박 권	오홍식	이화민	한진경
김성진	박서경	유성룡	임유원	한진옥
김소연	박선욱	은현수	장상준	한진이
김수희	박성연	이동우	장성민	현숙원
김승원	박준혁	이성대	전인수	홍석민
김승환	박지숙	이 승	정문기	홍성미
김영란	박지영	이신희	정영훈	황인실
김영주	박진경	이연경	정은채	황정택
김유진	박채리	이영경	정혜진	
김은실	배소현	이오늘	조경희	

